

김정은 “대한민국은 주적” 첫 발언

2년전엔 “주적은 전쟁 그 자체” 주장...尹정부 출범뒤 기류 바뀌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9일 군수공장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은 주적”이라고 규정했지만, 그는 불과 2년여 전만 해도 ‘남측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던 터라 입장이 바뀐 배경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국방발전전략회의 연설에서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직후엔 외부성 대변인이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밝혔고,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2022년 4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고 확인한 바 있다.

이런 기류는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달라졌다.

김여정은 2022년 8월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

정은은 2023년 1월 1일 보도된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측을 두고 “의심할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고 못 박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더니 이번엔 ‘주적’이라며 “기회가 온다면 주저 없이 수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하기에 이른 것이다.

물론 북한은 과거에도 종종 남측을 ‘주적’이라고 표현해 왔다.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주적’이라는 표현을 썼다.

그러나 김정은이 직접 주적이라고 규정한 것은 처음으로, 이는 남측과의 대결 구도를 더욱 명확하게 하며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한국의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북관계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군사 위협으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리지만, 과거 선거에서 북한의 도발이 보수세력 결집으로 나타난 경우도 적지 않아 북한의 의도를 예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부의 적을 내세워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내부 분위기가 쉽지 않은데 주민들을 두려워하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가 핵무력 강화를 통한 대적 분위기 고조”라고 분석했다.

배경이야 어찌 됐든 김정은이 직접 한국은 주적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대남 위협 수위가 높아져 당분간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김정은의 발언은 곧 당의 방침이고 정책 노선화된다”며 “향후 대남 초강경 행보가 군사를 비롯한 다양한 부처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새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

왕윤중 안보3차장 등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사진)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했다. 신설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중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 2차관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정자를 밝혔다.

이 실장은 “유철환 내정자는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 왔다”며 “현재도 국민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력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권익위의 선도적 역할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강인선 내정자는 국제 관계 전문 언론인 출신으로서 국제 정세에 밝고, 해외 현장 경험과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며 “다자 및 공공외교를 원만히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유 내정자는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이나 불우한 이웃에 대해서도 찾아가는 권익위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미 안보실장 “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취임후 첫 통화...“우크라 지원 협력”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확대와 비무장지대(DMZ)에서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포함한 북한 상황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장 실장 취임 후 처음으로 상견례를 겸해 진행된 양측 간 유선 보안 협의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측은 통화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이전하고 러시아가 이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한 점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했다.

특히 양측은 최근 서해상 포병 사격을 포함한 북한 도발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러 간 군사 협력이 엄중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런 무기 이전과 사용이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키우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수 위반하며, 세계의 비확산 체제를 약화하고, 유럽과 한반도,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안보 영향을 미친다고 주목했다.

양측은 북러 간 협력 확대에 비추어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의 안보 도전에 대응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로 약속했다.

장 실장은 “확장억제와 인도-태평양 전략, 신기술,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설리번 보좌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동구 아스티호텔에서 열린 국민의힘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 금고형 이상 땀 재판 기간 세비 반납”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경남서 신년인사회...“당 차원 법안 발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당의 정치개혁에 대한 결심을 이 자리에서 말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의원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재판을 방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국민의 비판이 정말 뜨겁다”며 “그 기간이 지나고 유죄가 확정돼도 입기는 지나고 할 건 다 하고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마련

되는 세비는 그대로 다 받아 간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며 당 차원에서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민주당이라도 국민의 눈, 경남인의 눈, 상식적인 동료 시민의 눈이 무서워서라도 이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 민주당 대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번 총선 공천 신청 시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면 이 약속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받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강은미 “일당 독점 광주 정치 확 바꾸겠다”

서구를 출마 선언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이 10일 “바꾸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일당 독점의 광주 정치를 확 바꾸겠다”며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광주 서구를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 현역 의원 중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처음이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서구의 브리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저의 정치적 소임이다”며 “일당 독재, 기득권 정치를 혁파하고 실종된 광주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광주시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총선 준비를 마쳤다. 그는 “광주-전남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공론화를 통한 시·도민 합의 도출, 이에 따른 국가 지원 제도화 등을 위해 군공



향 이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마복동 탄약고 공론화 ▲북합소광물 관련 상생 방안 마련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승격 ▲도시철도 2호선 공사 시민 피해 지원·대책 마련 등 서구와 광주시의 현안을 언급하며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번 총선은 광주 정치와 지역 발전의 미래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서구민과 광주시민들의 말씀을 듣고 더 좋은 정책과 비전을 보고하는 자리를 다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 서구의원, 광주시의원을 자니 강 의원은 단계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대표적인 풀뿌리 정치인이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